

백남기 사망진단 ‘병사’ → ‘외인사’ 수정

서울대병원, “직접 원인 경찰 ‘물대포’” ... 직접 사인 ‘심폐정지’ → ‘급성신부전’ 정정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수정된 사망진단서에는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적시하고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지목했다.

이 같은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간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내자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진료부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다”며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후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작년에 사망진단서가 문제된 이후에 특조위를 설치해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이 가진 기본 자세는 변한 바 없다”며 “개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진단서 작성에 있어 규범과 지침에 다르게 작성됐다. 당시 특조위는 강제하지 못했고 논의가 6개월 걸린 것일 뿐 정치적 변화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여성 참석자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일환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신설했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서울대병원 중환자

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부검 시도도 40일 넘게 잠해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명장 집행 포기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뉴시스

민주당 도당, 야3당 ‘일자리 추경 편성’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야3당의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추경 편성 차원에서 다룰 일회성 경제 문제도 야 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며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급수저·은수저·흙수저와 빈부격차의 문제, 나아가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같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라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또 다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추미애, 강경화 거부 “야당 발목잡기 도 넘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적 위기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이미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우리는 야당에 진정한 협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전직 외교부장관, 전현직 인권대사를 지내신 분, UN 직원이 나서서 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강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두 배를 넘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면 국회가 설 곳이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름 후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예정됐다”며 “특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와 주요 외교현안, 그리고 한미동맹의 운명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다. 대한민국이 외교 수장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이 우려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뉴시스

김현미 “투기 잡고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차단하는 맞춤형 규제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 안정을 높여야 한다”며 “이 두 축으로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거래가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V·DTI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 나와야”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LTV·DTI 규제를 푼 것에 대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LTV·DTI 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주택 구매자 대출을 일정 부분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에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LTV, DTI의 경우 일괄적인 강화보다는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수요에 한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각각 70%와 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LTV와 DTI를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권과 고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강화하

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지역에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선 전 부동산 거래가 뜸했다가 관광하던 수요들이 드러났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수요가 집중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면서 “개선책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태연 “안경환 여성 비하? 남성중심 사회 지적”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 등을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자란 무엇인가 저서 파문과 관련,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 사회가 돼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책이었고, 그런 표현”이라고 안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 해명하는 것을 보고, 당시 그 책이 나왔을 때 서평도 보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청문 과정 통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하자(가)가 있거나 자질 미달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텐데 지금 봐서는 약간 억지스럽다”며 “야당이 명분을 위한 명분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뉴시스